



공무원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특정감사결과 보고



감 사 실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임.

[감사실-4466(2018.9.18.)호와 관련]

I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I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0. 15. ~ 10. 26.(10일간)
 - ※ 사전자료수집(관련기관 자료요청) : 2018. 10. 1. ~ 10. 12.(10일간)
- 대 상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
- 조 사 반 : 청렴감사팀장 외 1명
- 범 위 : 2017.7.1. ~ 2018.9.30. 기간중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 내 용
 -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
 -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
 - 지나친 외부강의 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
 - 외부강의 요청 기관(단체)에 대한 우리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희로 신고누락 방지

Ⅲ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총 평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의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매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사 실시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온 바, 일부 신고 지연은 발생하였으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이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겠음.
- 그러나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 하고 향후 신고절차 수시 공지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함.
-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2018. 4. 17.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8. 6. 29.자로 일부 개정하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사후 보완신고 기간을 연장하였음.
- 향후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누락 등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코자 함.

외부강의등 신고 및 검직허가 현황

(단위 : 인원/건수)

구 분	계	학 교 의 강 의	협회(단체) 강의 등	위원회	기 타 회의 등	비 고
기 신 고	14 / 36	3 / 3	5 / 8	4 / 12	8 / 13	
신 고 제 외 대 상 신 고	5 / 8	1 / 1	1 / 2	3 / 4	1 / 1	국가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계	18 / 44	4 / 4	5 / 10	7 / 16	9 / 14	

※ 일괄신고건은 1건으로 산정

□ 주요 사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누락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3항, 제4항]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가 원칙임. ‘외부강의등’이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신고누락 사항은 없음.

▷ 향후계획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전신고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지속관리

✓ ‘외부강의등 신고’ 체크 포인트

- ① 직무관련성 ②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등
- ③ 강의·강연·기고등 ④ “대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
- ⑤ “사전” 신고 ⑥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 보완시 5일 이내
- ⑦ 국가·지자체 요청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 ⑧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시설운영위원회, 장기등급요양판정위원회등)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

구 분	전직원(직급에 관계없음)		비 고
	1시간	최대(1시간초과시)	
상한액	400천원	600천원	강의등 1시간 기고 1건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수령 가능. **(중복수령 불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6항]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위 대가기준은 사례금 상한액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행동강령 개정('18.6.29.)으로 상한액을 조정하였으며, 대상기간중 사례금은 총 18명 44건 6,300천원으로 기준초과 내역은 없음.

▷ 향후계획

- 대상기관(단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 지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

✓ ‘외부강의등 사례금’ 체크 포인트

- ① 외부강의는 반드시 관련기관의 요청공문에 근거함.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 행위 금지)
- ② 사례금 지급여부 및 대가기준 초과 사례금 여부 파악
- ③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후 반환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

[외부강의 관련 복무 준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공무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근무 시간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함.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하고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9항]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참석자는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 실시하였고 기타 근무시간 외 활용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 소홀사항은 없음.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3명이 있으나 불가피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수행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청장 미승인건이 1건 있음.

▷ 향후계획

- 부서장은 외부기관(단체) 강의 등 요청시 관련공문 검토로 직무수행 소홀사항이 없도록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 사전신고시 요청기관 공문 반드시 첨부
- 외부강의등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직무상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검토·승인 관리 강화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의 범위

- ☑ 공무원이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제외
-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
- ☑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님.